



폴란드

I. 일반개황

면적	312천 Km ²	GDP	2,093억 달러(2003년)
인구	38.2백만 명(2003년)	1인당 GDP	5,478 달러(2003년)
정치체제	이원집정부제	통화단위	Zloty
대외정책	2010년 Euro화 도입 추진	환율(달러당)	3.89(2003년)

- 발트해 남쪽에 위치하여 동쪽은 러시아연방·리투아니아·벨로루시·우크라이나, 서쪽은 독일, 남쪽은 체코·슬로바키아에 접해 있는 유럽에서 7번째로 큰 나라이며, CIS 지역을 제외한 중·동유럽권에서 최대의 경제규모와 인구를 가진 국가임.
- 폴란드인이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단일민족 국가로 폴란드어가 공용어이며 국민의 95%가 카톨릭교 신자임. 입법부는 임기 4년의 상원(100명)과 하원(4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부는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음.
- 1989년 체제전환 이후 실시된 급진적 경제개혁(Balcerowicz 시장경제체제 개혁)의 결과로 1994~2000년 중 연평균 4% 이상의 고도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이후 내수부진과 러시아 및 EU의 경기침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2002년까지 1%대로 성장률이 둔화되다 2003년부터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
- UN, WTO, IMF, IBRD, OECD(1996년), NATO(1999년) 가입국이며 지난 2004년 5월 1일 EU 회원국이 되었음. 우리나라와는 1989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투자보장협정(1989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92년), 사증면제협정(1993년) 등이 체결되어 있음. 2003년 말 기준 교역규모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 74백만 달러, 수입이 382백만 달러이며,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동국에 대한 해외투자규모(순투자 기준)는 총 49건, 514백만 달러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동향

〈표 1〉 주요 국내경제지표

	2000	2001	2002	2003 ^e	2004 ^f
경제성장률	4.0	1.0	1.4	3.8	5.5
재정수지 / GDP	0.3	-4.3	-3.6	-4.1	-5.2
소비자물가상승률	10.1	5.5	1.9	0.7	3.4

단위: %

자료: EIU, Country Report.

- 경제성장: 2003년은 당초 정부 목표치 3.5%를 상회하는 3.8%의 실질경제성장률 달성을 비롯하여 수출,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의 침체에 서 벗어나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 해였음. 2003년 성장의 핵심 동인인 강력한 수출증가세는 2004년에도 이어져, 상반기 성장률이 6.5%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동국 경제는 수출에 의해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저율의 인플레이션 및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율 감소와 함께 현재 강력한 경제성장 국면에 있기는 하나 지난 2년간의 공기업 민영화 지연과 20%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로 인한 실업기금의 과다 지출 등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6월, EU 집행위는 현재 GDP의 4%를 넘어서고 있는 동국의 재정적자 규모를 안정과 성장협약(SGP)에 따라 2008년까지 3% 이내로 낮추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IMF도 사회적 경비의 절감과 조세기반의 확장을 위한 일괄적인 재정개혁을 권고하고 있음.
- 소비자 물가: 1999년 중반 이후 유가상승 등의 외부적 영향으로 2000년 들어 물가가 10.1%까지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 시행과 식료품 가격의 안정에 힘입어 2001년 이후 다시 한자리 수로 낮아졌으며, 2003년에는 0.7%라는 매우 양호한 실적을 보였음. 그러나 2004년 이후 경기활성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EU 가입에 따른 소비재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는 매년 2~3%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구조

- 체제전환 이전 사회주의식 중앙계획경제 하에서 동국의 산업구조는 중공업 위주의 제조업과 농업이 중심(1988년 기준, 대 GDP 비중 54.8%)을 이루고 있었으나 시장경제

로의 전환과 함께 산업의 중심이 서비스부문으로 급속히 이전되고 있음. 한편, 제조업 부문 또한 광업 및 생필품 생산 위주에서 선진국 기업의 활발한 직접투자에 힘입어 전기·전자·자동차 등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음.

- 2002년 기준 GDP 구성을 산업별로 보면, 운송, 금융, 공공행정 등 서비스부문이 45.1%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건설을 포함한 제조업이 30.6%, 무역이 21.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임업은 3.2%에 불과함. 주 교역국은 독일로 동국 전체 수출의 32.3%, 전체 수입의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와 운송장비임.

3. 경제정책

- 2004년 6월 취임한 Belka 신임 총리는 의료서비스 개혁, 긴축재정정책 이행, 국유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를 최우선 추진 정책으로 설정하고, 의회에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밀월기간을 요청한 바 있음. 한편, 최근 계속되는 국내수요의 강력한 성장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촉발하고 국내외 공공부채를 확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거시경제의 복원과 안정성 유지가 관건으로 제기되고 있음.
- 2010년을 목표로 한 Euro화 도입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2007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마스트리히트 기준에 부합하도록 GDP의 3% 이내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EU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이행가능성은 미지수임.

4. 대외거래 동향

〈표 2〉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0	2001	2002	2003 ^e	2004 ^f
경 상 수 지	-9,998	-5,357	-5,007	-4,085	-3,600
경 상 수 지 / G D P	-6.1	-2.9	-2.6	-2.0	-1.5
상 품 수 지	-12,308	-7,660	-7,249	-5,725	-5,400
수 출	35,902	41,664	46,742	61,007	75,500
수 입	48,210	49,324	53,991	66,732	80,900
외 환 보 유 고	26,320	25,648	28,650	32,579	..
총 외 채 잔 액	63,259	63,275	69,521
총 외 채 잔 액 / G N I	38.9	34.8	37.2
D . S . R .	20.8	28.0	22.5

자료: EIU, Country Report.

-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 산업생산의 효율성 증대와 수입증가율을 앞지르는 수출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가 해마다 감소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율이 2000년 6.1%에서 2003년에는 2.0%까지 낮아졌음. 동국의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추세는 EU를 비롯한 세계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04년에 1.5%, 2005년에는 1.3%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동유럽 최대의 FDI 유입국: OECD 발표에 따르면 동국은 2003년 중 42.2억 달러를 유치함으로써 동유럽 국가 중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것으로 나타남. 1994~2003년 중 누계액 기준으로도 체코(379억 달러)보다 141억 달러가 많은 총 520억 달러를 유치하였음. 한편, 지난 5월 1일 EU 가입에 따른 투자 여건 개선의 기대감으로 2004년 상반기 FDI 유치 규모는 29억 달러에 이르는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으로는 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 동국은 보다 많은 FDI 유치를 위해 2004년 들어 법인세를 27%에서 19%로 인하하였음.

Ⅲ. 정치·사회 동향

1. Belka 신임 총리 정부 출범

- 2004년 6월, 부패 스캔들로 Miller 총리가 중도 하차하고 경제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Belka 총리가 취임함.
- 의회 내 과반수 의석 미달에도 불구하고 2004년 3월 연정을 탈퇴한 의원들의 Belka 총리에 대한 지지선언과 최근의 강력한 경제성장 실적에 힘입어 오는 10월에 예정된 재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계속 거론되어 오던 조기 총선은 내년 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Belka 정부의 출발은 예상보다 순조로워 보임.
-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 추진과 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져 있고 전임 총리와의 정치적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Belka 총리의 노력으로 집권당내 계파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차기 총선에서는 야당인 우파정당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됨.

2. 사회적 안정성과 주변국과의 관계는 양호한 편

-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복지혜택의 축소,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사전 구조조정, 20%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과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져 있기는 하나 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님.
- 이라크전 당시 미국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파병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개선된 반면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과는 다소 불편해졌음.

IV.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 주요 신용도평가기관 등급

- Moody's: A2
- S&P: BBB+
- Fitch IBCA: BBB+
- OECD: 2등급(2004. 1)
- Euromoney: 45/185(2003. 9) → 47/185(2004. 3)
- I.C.R.G: 49/140(2003. 9) → 52/140(2004. 8)
- I.I: 39/172(2003. 9) → 40/172(2004. 3)

2. 주요 ECA의 지원 태도

- 미국 EXIM: 전액인수가능, 한도적용 없음
- 영국 ECGD: 전액인수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 독일 Hermes: 단기 전액인수가능

3. 외채 상환능력

- 파리클럽(1991년)과 런던클럽(1994년)으로부터 대규모 리스케줄링과 채무감면을 받은 후, 채무구조의 개선과 지속적인 수출신장세 유지로 국제신인도가 제고되었음.

-
- 총외채규모는 GDP의 40%를 초과하여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강력한 수출증가세로 인하여 D.S.R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동국의 외채상환 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V. 종합의견

- 2003년은 1%대의 저성장에 머물렀던 지난 2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실질 경제성장률 증가, 수출증가, 소비자물가 안정,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 등 국내경제 및 대외거래에 있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한해였음.
- 2003년의 경기회복 추세는 2004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EU 가입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외부의 기대감과 이에 부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동유럽 최대의 FDI 유치국이라는 현재의 위치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이 동국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특히, 재정적자 축소 문제는 Eurozone 가입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므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상의 수렴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동국 정부로서는 보다 강력한 긴축통화정책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공기업 매각을 통한 FDI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집권당의 의회 내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와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간 결속력 약화, 국민 지지도의 하락, 여야간 대립 등 정치권의 불안정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키고 있어 동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의 주요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김 판 수】

